

‘강원경제인페스티벌’ 오늘 정선서 개막

**이틀간 하이원리조트서 열려
강원경제인상 시상식도**

강원경제인들의 도약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가 펼쳐진다. 창간 70주년을 맞는 강원일보사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10일부터 이틀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15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관련기사 8·9면

이날 행사에는 지역 경제인과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경기 부진 극복방안, 강원경제가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는다. 행사 첫 날인 10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제9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김수훈 티에스(주) 대표 등 각 부문 수상자 4명이 총 1억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시상식 후에는 광속철 CnE혁신연

구소장의 기초강연이 이어진다. 광소장은 ‘이제는 창조경영이다’를 주제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천해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김병조(개그맨)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명심보감’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행사 이틀째인 11일에는 양희봉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이 조찬강연을 펼친다. 양 청장은 ‘한·중·일 경쟁력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여 한중 경쟁이 치열해진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6시30분부터 하이원 CC에서 화합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강원경제인 골프대회’가 펼쳐진다.

강원일보는 2006년부터 매년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을 개최해 오고 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중국 방문이 가져온 후폭풍은 실로 엄청나다. 서방세계의 우려 속에서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의 결단 자체도 놀랍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 서방국가(중

국 관점에서)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지상 최대의 군사쇼나 마찬가지인 중국 군대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61년 전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자리를 차지했던 천안문 광장 성투에는 북한의 지도자는 구경조차 못하고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깨를 나란히 한 장면이 전 세계에 타진됐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통일이란 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자주 외교 핵심도 통일이란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차질하게 움직이는 결과라는 인식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 대한민국에 대해 무한한 긍정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분명 아니다. 더욱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주변 국가와의 다자 간 협의를 통해 꼬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 의지를 원칙으로 삼고 접근해

강원포럼

박용성 민주평통 강원부위원장



야 한다. 근래 한반도는 상당한 부침을 겪었다. 우리는 이번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 긴장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바로 ‘원칙’의 중요성이다. 원칙을 지키고 대응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원칙’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변

원칙과 통일

국가의 관계 속에서 원칙에 기초한 자주 외교의 힘이라 생각한다.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도가 최근 사건을 겪으면서 치솟는 것에서 국민의 생각도 변함없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통일’을 향한 진정성이라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 국가에서 가장 민감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통일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는 북핵 중심에

서 통일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우리 정치도 당리당략으로 통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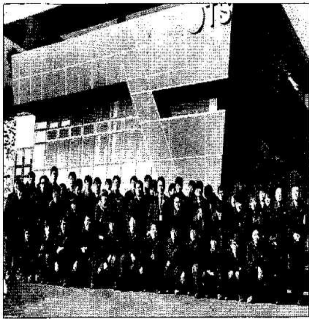
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가장 먼저 민주주의여야 한다. 핵고발변의 진리이자 대체불가인 원칙이다. 다음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통일을 향한 노력은 대통령만의, 행정 부만의 속제는 아니다. 분단 70년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향한 준비를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로, 차질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해야 한다. 접경지인 강원도가 그 선두에 서야 한다. 이제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큰 밑그림을 그려 차근차근 접근해 간다면 강원도의 미래는 매우 활기차지 않을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당장 수년 후 벌어질 일일 수도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나 평화생태의 중심으로 가는 것도 통일한국의 밑그림으로 충분하다. 통일,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원칙은 지킬 때 빛을 발하는 법이다.

의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15 강원경제인페스티벌 강원경제인상 수상자 /



“전기차 세계시장 장악”

대상 김수훈 테에스 대표

테에스(주)는 2004년 설립돼 10년 이상 도내 기업으로 경영혁신과 신기술 개발에 노력해 왔다. 2014년 말 기준 총자산 60억9,500만원, 상시종업원 8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미래 유망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있어 하이테크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을 통해 국내시장의 MS 1급(골프카트용 배터리팩 공급)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 남극탐험용 전기자동차인 에코모빌을 개발했으며 저속형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또 주문제작형 전기셔틀버스를 제작했고 국내 최초 저속형 전기자동차의 리튬이온배터리팩도 개발했다.

이 업체는 인재 육성 및 양성을 위해 산학교류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표창을 받았고 산학을 통한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 장관의 최우수산학기업 표창도 받았다.

해외수출에 따른 외화획득도 이어지고 있다. 폴카트 세계 시장점유율 3위인 아마허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기술도 개발해 환경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내 유일 잠수정 개발”

신기술인상 임성기 ㈜보고 대표

(주)보고는 1992년 삼척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공장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품질경영을 통한 동종업계 최고의 품질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화합으로 도에서 성장 및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수중 수상 운행이 가능한 잠수정 개발에 성공하여 방위사업청 중소기업 우수방산제품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해양 국토방위, 해상안전 및 치안에 이바지한 바도 인정되어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보유한 지식산업 업체다.

이 업체는 대한민국 해군·해경 등 국가기관을 위해 총 226척에 달하는 소형특수선박을 설계 및 제작, 국내 해양·국토방위, 해상안전·치안에 이바지하고 있다.

타지의 숙련 기술자 대신 지역민을 채용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의 90%가 강원도민이며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권위 있는 해외방산전시회에 매년 2회 이상 참가하는 등 해외마케팅에 과감히 투자해 온 결과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페루에는 고속단정 10척을 수출했다.

“지역사회와 상생 앞장”

건설인상 염돈설 토진종합건설 대표

토진종합건설(주)은 2002년 7월 설립 이후 토목, 건축 등 다수의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했다. 특히 무사고 무재해에 노력했으며 하자 없는 건설공사에 힘써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여 년간의 지역 각종 사회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계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지역 내 고용 창출, 지역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기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선행을 실천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최적의 인력관리와 하도급 관리로 공사기간 내 무사고 준공을 위해 각 공종마다 치밀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부실공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특히 2002년 8월 태풍 투사 피해가 발생하자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으로 신속한 시공에 나섰다.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하려는 철재업체들의 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 건설협회 회원들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염돈설 대표 역시 지역체육회장 및 번영회장을 지내면서 지역의 발전과 사회의 안녕 및 번영을 위해 힘쓰기도 했다. 또 춘천지방법원 영일지원 가사조정원으로 13년째 활동하면서 각종 지역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매출·판로 꾸준한 성장”

특별상 이미옥 ㈜해송KNS 대표

(주)해송KNS는 2007년 9월 설립돼 자연승이와 송이 가공식품의 도매업을 시작했다. 2008년 11월 ㈜해송KNS를 설립해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경영이념을 통해 꾸준히 사업에 매진 중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동참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근의 불우한 이웃을 위한 후원도 꾸준히 펼쳐고 있다.

주생산품은 버섯류 등 60여 종의 임산물이며 상시종업원은 10명이다. 매출액 28억원이다. 총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주거래처는 아마트, 신세계로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등에도 납품 중이다. 매출도 2010년 20억원, 2011년 15억원, 2012년 18억원, 2013년 20억원, 2014년 28억원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에도 노력해 노사분쟁은 단 한번도 없었고 성실납세의무를 다해 매출 이익의 1%를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산학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연승이버섯 및 능이버섯을 등걸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버섯이 함유하는 고유의 영양을 자연생버섯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을 특허 완료했다.

“평창 오륜 지역업체 참여 늘려야”

건설협 도회, 지역순회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주세요.”

평창지역 건설업체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는 9일 낮 평창의 한 음식점에서 건설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평창지역 건설사들은 2018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가 평창인 만큼 회원사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오인철 도회장에게 요청했다.

오 회장은 평창지역 회원사 대표들에게 평창올림픽 공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긴급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오 회장은 지난달부터 지역회원사들을 방문,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흥천을 시작으로 개최된 지역순회 간담회는 오는 17일 고성에서 이어진다.

오인철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원주국토관리청장에 영월 출신 전만경씨

제48대 원주국토관리청장에 전만경(54·사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이 임명됐다. 전만경 청장은 영월 출신으로 서울배문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인하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장,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태백 도로건설 ‘지지부진’

통동~도계 8년째·국도 35호선 4년째 공사

태백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건설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원주국토관리청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7년 2월 태백시 통동에서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를 잇는 태백~도계 간 도로 건설공사(총 연장 11.3km)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배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기간을 2014년으로 2년간 연장한 데 이어 다시 2016년 연말로 2년을 연장한 상황이다.

특히 공사에 들어간 지 8년이 넘었지만 공사 진척율은 78%대 수준인데다 내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총 연장 11.3km에 불과한 도로건설공사를 무려 9년 동안이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태백골~삼수령재를 잇는 국도 35호선 도로용량 개량공사(총 연장 7.6km)도 정부의 예산 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2011년 착공 후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강원남부권과 충북 내륙권, 동해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연결도로 역할을 하는 동서 6축 고속도로도 평택~안성, 안성~음성, 음성~충주, 충주~제천 등이 마무리됐지만 제천~삼척 구간(123.2km)만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생활·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로

건설공사의 완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생활 및 통행 불편 피해를 장기간 입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장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태백~도계간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예산이 모두 배정돼 내년 9~10월 공사를 마무리짓고 시범운영 등을 거쳐 그해 연말 개통할 예정”이라며 “국도 35호선 도로용량 개량공사도 현재 터널 30m를 굴착하는 공사만 남아있는 등 내년 연말이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김우열 woo9@kado.net

건설사·공무원 상습협박 ‘브로커’ 구속

춘천지검 원주지청... 금품 수수·공사수주 방해 혐의

타 업체의 공사 수주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내 건설업체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습협박을 일삼아 온 이른바 ‘건설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9일 고발 취하 등을 병자, 건설업체와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거나 공사 수주를 방해한 혐의(공갈 등)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B건설업체에서 시공한 원주 노림리 자전거도로 펜스가 부

실자재로 파손됐으며 경찰에 고발한 뒤 고발취하명목으로 B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검찰조사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횡성과 원주지역 건축 자재업체의 공사 수주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생산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자격 업체를 선정한다’는 허위 민원을 제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타업체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공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흥천군청

과 횡성군청이 각각 발주해 진행된 일부 공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자격 업체에 공사를 밀어줬다”며 해당 군청 앞에서 담당 공무원의 얼굴이 새겨진 전단지 등을 무단 배포하는 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타 업체의 공사 수주를 방해한 뒤 자신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조달청, 지자체, 경찰에 허위 민원서류를 수차례 제출했으며 피해 지역만도 춘천·원주 등 6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정성원

국토부,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 발표

공사비 깎는 '甲질' 계약 못한다

건설분야 수직·종속 관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공공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이른바 '수퍼 갑(甲)'으로 불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이 불공정 거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면서 원-하도급자, 하도급-근로자-장비업자로 이어지는 건설산업 생태계의 '비정상적 정상화' 작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국토부는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공공부문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근절'의 후속조치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공공기관, 건설업체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단가 후려치기' 수단 된 공공기관 내부규정 삭제 인허가·민원 등 발주처 업무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손질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공사비 부당 삭감의 원인이 됐던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이 삭제된다. 국가계약법은 시공사 책임없는 설계변경 또는 신규항목 단가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선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정상금액의 10~15%를 일방적으로 삭감해왔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도 설계금액의 ±2~±3% 내로 운영키로 했다. 지금은 일부 공공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6%까지 예정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

터널공사 시 가격차장 운영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해방지

를 위한 응급조치비 등과 같이 발주처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설사들에 떠넘기는 관행도 내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바뀐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업무를 건설사에 부담시키던 부당특약도 사라진다.

소송, 클레임(계약내용 변경 청구), 손해배상 등 발주기관에 대한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된다. LH, 철도시설공단 등이 내부 규정과 특약을 손보기로 했다.

공공기관 '갑질'의 최대 희생자였던 건설엔지니어링,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도 추가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근거를 담야 '대가 지급 없는 업무지시'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야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개선을 유도한다. 각종 건설계약의 기준이 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완해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일일 0.001%) 수준으로 통일하고, 사용승인 이후 준공처리 지연에

대해선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부담을 공제하는 등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 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하도급자,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발주기관의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을 깨려면 예산 편성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삭감 위주의 예산 검토 방식은 시공단계에서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예산검토 시스템을 건설담당 부처와 예산 편성·배분 담당 부처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아하! 그렇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관급공사계약

Q 지방자치단체 Y는 건설사 X가 한국 내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독일 회사의 공법을 적용한 분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X와 Y는 시설공사계약은 추후에 체결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X가 기계장비를 독일에서 미리 주문하여 수입하되 Y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 발주한 기계설비 대금 등 X의 손해를 Y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협약을 작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X는 기계장비를 국내에 수입하였지만, Y는 사업을 포기하고 X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건설사 X는 Y와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이 사건의 쟁점은 X와 Y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즉 X와 Y가 작성한 '협약서'를 지방계약법 제14조가 요구하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 협약서가 지방계약법에서 요구하는 계약서로 인정된다면 X와 Y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그 계약에 따라 X는

Y에게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 협약서를 지방계약법이 요구하는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대금이나 이를 확정할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Y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Y가 배상하기로 한 기계설비 대금 등 Y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그렇다고 Y가 X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X는 Y를 상대로 다시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SOC예산 축소 직격탄 내년 '건설투자'도 비상

주택공급과잉 우려까지 겹쳐... 2~3%대 성장 불투명

내년도 건설투자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틀어쥐기 시작한 데다 올해 건설투자를 떠받치고 있는 주택시장도 공급과잉 우려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제시한 3%대 성장은 물론 한국은행 전망치인 2.5% 달성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도 건설투자가 각각 3.9%,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SOC 본예산을 늘린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올해보다는 내년에 건설투자 증가율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에는 정부·한은과 시장 간 큰 차이가 없다.

올해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로 1분기 0.6%, 2분기 1.6%를 기록하며 상반기까지는 다소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 추경사업 집행과 주택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1.0%)에 비해 증가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4.5%, 한은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여러 악재가

속출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SOC 예산 축소가 내년 건설투자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24조8000억원)보다 6.0% 감소한 2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문제는 추경을 편성하고서 이듬해 SOC 예산을 줄였을 경우 건설투자가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추경을 포함해 25조원의 예산이 SOC 분야에 배정됐고 그해 건설투자는 5.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SOC 예산이 23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2014년에는 건설투자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 공급과잉 우려도 내년 건설투자의 복병이다. 지난 6월 주택시장은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미분양주택 수가 올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예산과 주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건설투자 증가는 그리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남·최남영기자knp@

설계변경 단가 후려치기·예정가격 산정방식 '대수술'

·공사비 부담식감 제동

국토교통부가 9일 발표한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은 공공기관의 '갑(甲)질'에 대한 사망선고를 의미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상식을 기초로 건설산업 발주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수술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각종 불공정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컸던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관행에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지만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을 막을 장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 단계로 그대로 전이돼 부실시공과 국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지시한 이유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건의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전국의 건설현장까지 개선안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발주기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토부-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돼야

'협의 단가' 무시한 내부지침 운영 막아 예가, 설계금액의 ±2~3%내 적용키로

한다. 또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혁신작업이 속도감 있게 전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발주자의 공사비 부담 식감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설계 변경 시 협의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국가계약법이 정한 협의단가(설계변경 시 단가와 '설계변경 시 단가'×낙찰률 사이 협의 또는 평균가격)를 무시하고 있다. 실제 A건설사는 ○○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요구에 따라 마감재를 교체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1억120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B건설사도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시공 중 암(흙·비위)판정 결과, 발주자 설계보다 흙깎기 수량이 크게 증가(1000~9000㎡)해 협의단가를 적용·정구했지만 1억원가량 삭감된 돈을 받았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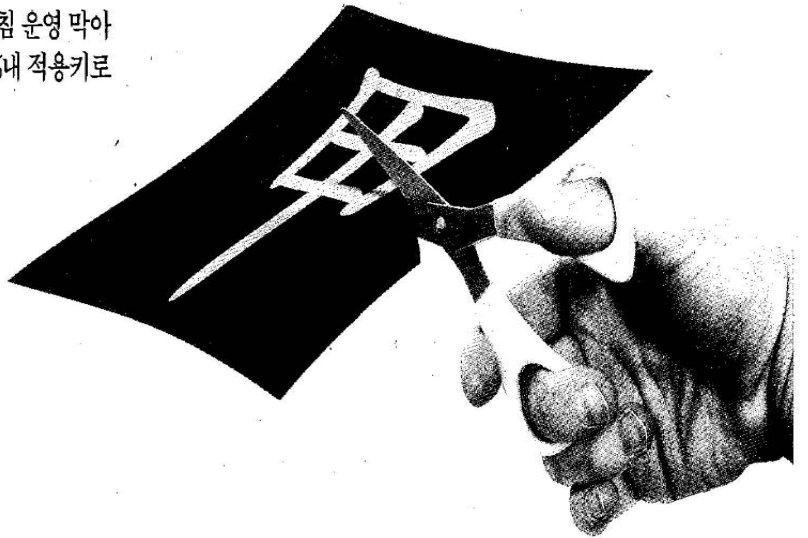
공사는 내부지침에 '암판정 결과'를 협의 단가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나 신규항목의 단가를 상호 협의 없이 발주자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며 이 같은 내부지침을 운용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에 규정삭제를 주문했다.

실질적인 '공사비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도 이번 대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공구의 예정가격을 설계금액(836억원)의 0~6%(785억~836억원) 범위로만 정하고 추첨해 일반적인 예정가격보다 약 30억원 낮게 발주했다. 이 공사를 낙찰받은 C건설사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 22억원 공사비가 삭감된 채 공사를 수행했다. LH와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2~3% 내로 운영키로 합

의했다. 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2.5% 기준을 적용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공개인 기초금액(가격) 기준보다 공개되는 설계금액을 토대로 적정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불공정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 시공사에 비용 떠넘기기 부당특약 손질

산업안전보건비 등 정상화 추진 '소송금지' 내부지침도 대폭 개정

#1. D건설사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터널구간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시도를 터널 인근 가작치장에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내부지침(단가산출표준)에 가작치장 운영비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가작치장 임대료, 상하차비용 등 5억원을 D건설사에 부담시켰다.

#2. E설계회사는 ◇◇공사가 발주한 △△도로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합동사무소를 9개월간 운영했으나 소요비용(6000만원)의 일부(800만원)만 지급받았다. F설계회사도 같은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5개월간의 합동사무소 운영비 1억2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받았다.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 '대가 없는 추가업무' 금지

9일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는 이처럼 발주기관의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담고 있다. 신규 터널공사에 가작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비용을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새 지침을 만들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음급조치비 등 발주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항목에 대한 부담 삭감 또는 거부 관행도 개선된다. 발주자는 공사비에 해당 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127~2.44%까지 반영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삭감해왔다. 4대 공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정정하고 신규공사는 설계에 법이 정한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계약법령이 발주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음급조치 비용 등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불가항력 사유에 한해서만 발주자 부담으로 하던 내부지침을 삭제키로 했다. 발주기관이 용역계약 종료 후에도 수

직처럼 활용해왔던 건설기술용역 분야도 메스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합동사무실 운영비처럼 발주기관별로 과업지시서에 추가 업무에 대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모든 기관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분야 등은 불공정 관행 사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주처가 해야 할 일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관행도 바뀐다. OO공사는 일괄입찰로 발주한 △△건설공사의 시공사 H 건설사에 대해 '민원 해결'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입찰안내서 규정을 들어 사업 이전부터 제기된 인근 마을의 어업피해보상비 약 4억원을 시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자질조사 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을 시공사 부담으로 해왔다. 또 철도시설공단은 공사손해보전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손해를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겼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도 시공사에 부담시켰다. 도로공사는 공사 용지 미확보로 인한 공기연장 등 부담을, LH는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을 각각 시공사에 전가해왔다. 이 같은 부당특약은 이번 개선안에 계기로 모두 삭제된다.

소송 제기, 클레임, 손해배상 등을 제한한 내부규정과 부당특약도 삭제된다. LH는 사전에 서면확인을 안한 사항에 대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비용과 협의 없이도 대가 지급 지연이 가능한 내부규정을 운영해왔다. 또 자체 시공평가를 통해 80점 미만인 건설사는 최대 1년간 입찰참가를 금지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의제기 후 30일 이후에는 소송제기를 금지했고 도로공사는 연차별로 납부할 수 있는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후 일시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4대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특약 등을 다음달 초까지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 민간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

표준도급계약서 '지체상금' 기준 신설... 공공공사 수준 적용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건설분쟁 조정 참여의무 등 포함

발주자-원도급자 간 불공정관행 개선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적용된다. 다만 민간분야에선 발주자가 선택적으로 국토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채택하는 만큼 공공분야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빈번한 지체상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했을 때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내는 돈이다. 공공공사의 지체상금은 하루 기준 0.001%이다. 앞으로는 민간공사에서도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공공사 기준을 따른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발주자가 소한 결함을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빼기로 했다.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는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도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사비 잔금은 지급처럼 준공처리 이후에 지급한다.

발주자가 추가·변경 공사를 구두로 지시한 경우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원도급자의 관리도 보호된다. 지금은 이 경우 원도급자가 서면 확인요청을 하더라도 발주자의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 앞

로는 원도급자의 확인요청에 대해 발주자가 15일 이내 회신하고 이 기간 내 회신이 없으면 통지내용대로 공사내용을 추가·변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을 부인하고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야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개선되고 민간분야에 표준도급계약서가 정착되면 공공과 민간분야 양쪽에서 평등한 계약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건설현장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 건설업계 반응

"업계 건의사항 대부분 반영... 제대로 실천됐으면"

국토교통부가 9일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건설업계는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를 중심으로 이번 개선안에 대해 환영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와 발주기관이 불공정관행 개선을 확정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협회는 국토부 TF에 적극 참여해 4대 공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해 협회 건의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조정하는 공사비 삭감과 불공정특약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민간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의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협은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3월 사례를 조사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같은 해 5월26일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최삼규 건협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해 이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끌어 냈다.

이어 8월에는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관련 정책자료'를 발간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되기도 했다.

결국 올해 3월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불공정 개선 TF를 발족했고 이 결과 이번 개선방안이 발표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서는 감사원에 불공정거래 관련자료를 제출했고, 감사원은 지난 7월 발주기관들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맞게 관

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건협은 국토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완전화 사라질 때까지 고품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협회에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TF'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성요소까지 촘촘히 전달되고 실천된 건설현장에 만연한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선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식기자 jskim@